

ASAN REPORT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론연구프로그램

2015년 8월



Asan Report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론연구프로그램 | 2015년 8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 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김 지 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2011),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Political Studies*, 2010),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래리 다이아몬드·신기욱 엮음,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 지 형

이지형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 연구원이다. 미국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CSIS Young Leader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국 외교정책, 북한 문제, 경제제재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에서 정치학(Government)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목차

요약 09

들어가며 12

1. 일본이라는 나라

 (1) 일본 이미지 13

 (2) 일본인과 일본 문화 15

 (3) 일본과 아베 총리 호감도 18

 (4) 한일관계 인식 20

2.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

 (1)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문제 22

 (2) 역사 문제 인식 차이 25

3. 한일 역사갈등을 넘어

 (1) 한일관계 정상화와 역사 문제 27

 (2) 한일관계 과제 30

 (3) 제한적 한일협력 31

 (4) 한일관계 발전 방안 34

나가며 35

부록 37

그림

[그림 1] 일본 이미지 14

[그림 2] 일본인 친밀감 16

[그림 3] 일본 호감도 17

[그림 4] 호감도 격차: 일본 대(對) 아베 총리 20

[그림 5] 한일관계 평가 및 전망 21

[그림 6] 한일관계 인식: 경쟁 대(對) 협력 22

[그림 7]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인식 23

[그림 8] 한일관계 발전 장애물 24

[그림 9] 일본의 과거사 반성: 정치인 대(對) 국민 25

[그림 10] 한일 역사갈등의 원인 26

[그림 11]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27

[그림 12]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의 관계 28

[그림 13] 한일정상회담 의제 30

[그림 14] ‘투 트랙’ 대일 외교: 과거사와 한일협력 분리 31

[그림 15] 일본의 안보역할에 대한 인식 34

[그림 16] 한일관계 발전 방안 35

표

[표 1] 연령대별 일본 이미지 15

[표 2] 연령대별 주변국민 친밀감 17

[표 3] 연령대별 일본 호감도: 부문별 호감도 18

[표 4]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 29

[표 5]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32

요약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점점 찾기가 실패를 거듭해서다. 수교 50주년(6월 22일)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였던 한일관계가 또 다시 수렁에 빠졌다. 한일 양국이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했지만,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 요원해 보이는 이유다.

수교 50주년 직후 일시적으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로 연내 정상회담 성사 등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갈등의 핵심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일본’을 어떻게 보고, 향후 한일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봤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한일관계에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의 골은 깊지만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로 다수의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고 복잡한 역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역사 문제와 별개로 산적한 현안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은 ‘일본’하면 주로 ‘후쿠시마 원전사태(31.3%)’, ‘식민지배, 군국주의(24.1%)’, ‘아베 총리 등 정치인(22.6%)’을 떠올렸다.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한일관계가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이다. 한국인은 미국인(5.82점), 중국인(5.06점)보다 일본인(3.74점)을 덜 친밀하게 느꼈다(0= 매우 멀게 느낀다~10점= 매우 가깝게 느낀다). 일본 문화와 상품 등에 대한 호감도는 음식(4.41점), 관광(4.14점), 공산품(3.87점), 대중문화(2.7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20대에서 일본인 친밀도와 일본 호감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20대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고, 경제대국 위상이 확고했던 20여 년 전 일본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감을 덜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음~10점= 매우 호감이 있음) 조사에 따르면 반일(反日) 정서는 일본(2.91점), 일본인(3.74점)보다 아베 총리(1.36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집권 전부터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 아베 총리가 집권 후 ‘다케시마의 날’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안부 강제성 부인 발언 등으로 한국인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평가와 전망이 모두 부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몇 년간 더 나빠졌고(‘나빠졌다’: 80%대 후반),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나빠질 것’ + ‘차이 없을 것’: 70%대)이 짙었다. 또 양국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한일관계를 경쟁(競爭)으로 본 한국인도 올해 6월 70%까지 늘었다.

식민지배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의 우경화에 우려(72.8%)를 표시했다. 우려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11.7%에 그쳤다. 역사 문제 중 한일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현안으로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37.3%)와 ‘독도 영유권 문제’(36.1%)가 지목됐다. 최근에는 과거사 사과와 배상 문제가 본격 논의되면서 ‘위안부 사과 및 배상 문제’(19.8%)를 걸림돌로 보는 한국인이 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20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향후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위기에 처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봤다. 역사인식 차이로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다. ‘8월 아베 담화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더라도’라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정상회담 개최 찬성이 56.3%로 반대(38.5%)보다 많았다. 일본에 대한 반감,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은 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을까? 주된 이유는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65.2%)해야 한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에서 비롯되었다.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과거사 반성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88%)이 압도적이었으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82.6%) 역시 지배적이었다. 또 일본 정치인과 국민 중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본 한국인의 비율은 각각 11.6%, 30%에 불과했다.

이 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일본과의 관계에 매우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해를 공유하는 현안에 협력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것이 일본과의 결끄러운 역사 문제들을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과의 갈등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역사 문제가 노력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오해’를 풀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 간 외교 관계가 철저히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감안하면, 양국 정상은 우정이나 불화가 이를 좌우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서로가 좋아하거나 싫어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국익일 뿐이다. 한국인은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들어가며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한 때 순풍이 불었다. 역사 문제로 대립해 온 양국 정상인 상대국 대사관 주최 기념식에 참석해 화해 분위기를 연출(22일)했고, 아베 총리는 양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정상회담(23일)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이다.¹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한일관계가 해빙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한일관계는 양국이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한 뒤 일본이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렁에 빠졌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의 움직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양국 정상 기념식 교차참석은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접근이었고,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없다는 관측에서다. 한일관계를 낙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끊겨있던 대화 채널을 열었지만, 아베 총리가 정작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양국의 노력이 엇보이는 가운데,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보고서는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을 살펴보고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한일정상회담 지지와 일본에 대한 반감이라는 모순된 태도가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고,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일본과 일본인에 낮은 친밀감을 보였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역

사 왜곡,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등의 영향이다. 일본에 대한 인식은 연령층에 따라 달랐는데, 그나마 20대에서 긍정적이었다. 반일(反日) 정서는 일본, 일본 국민보다 아베 총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발언이 한국인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향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즉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다.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했다.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한국인이 한일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차피 역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별개로 협력해야 할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일본이라는 나라

(1) 일본 이미지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일본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 위해 일본이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지 물었다. 가장 다수인 31.3%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지진 등의 재난’이 연상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및 지진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떠올린 한국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24.1%가 ‘식민지배 및 군국주의(제2차 세계대전)’, 22.6%가 ‘아베 총리 등의 정치인’이 떠오른다고 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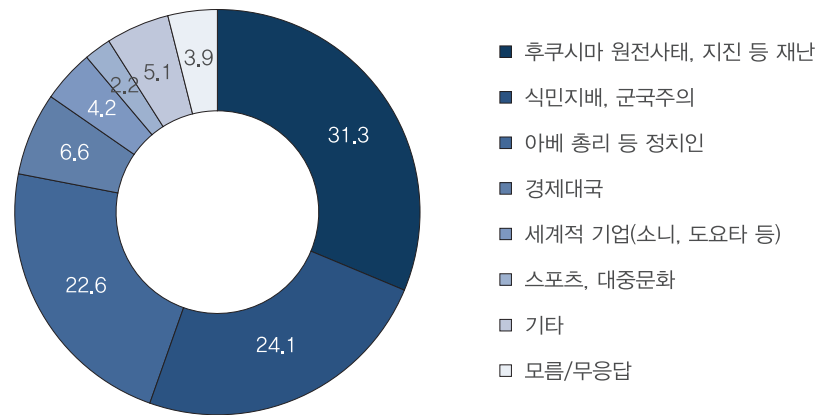
많은 한국인이 ‘일본’하면 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역사 문제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민지배 및 군국주의’와 ‘아베 총리 등 정치인’을 선택한 비율을 합하면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최근 몇 년 사이 악화된 한일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조준형. 2015. “아베 ‘한일관계개선 움직임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고 싶다’”, 연합뉴스. 2015년 6월 23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3/0200000000AKR20150623124900073.HTML> (검색일: 2015년 6월 25일).

2.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5.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국가수장 호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0~1점대(0= 전혀 호감 없음~10점= 매우 호감 있음)에 머물렀다.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자위권 행사 추진 등 일본의 우경화가 복합적으로 과거 식민지배 역사와 군국주의를 떠올리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경제대국이나 세계적 기업(소니, 도요타 등), 스포츠나 대중문화를 떠올린 한국인은 13%에 불과했다.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전보다 감소함에 따라 경제대국(6.6%)이나 세계적 기업(4.2%)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소수였다.

[그림 1] 일본 이미지³ (단위: %)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대에 따라 매우 달랐다. 각 연령대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20대는 ‘일본’하면 ‘후쿠시마 원전사태, 지진 등 재난’이 떠오른다는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식민지배나 군국주의’가 19.7%, ‘아베 총리 등 정치인’이 10.5%였다. 30대는 ‘원전사태, 지진 등 재난’이 43.5%, ‘아베 총리 등 정치인’ 21.2%, ‘식민지배나 군국주의’ 15.8%의 순으로 주로 국가재난과 역사 문제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20대와 비슷했다.

40대와 50대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수가 경제대국의 이미지를 떠올린 점이 특징적이다. 40대의 8.6%와 50대의 8.1%가 ‘일본’하면

‘경제대국’을 떠올렸다. 이들이 20~30대였던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일본이 누렸던 경제적 호황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일본의 경제침체를 보고 자란 20~30대의 4.8%만 ‘일본’하면 ‘경제대국’을 떠올린 것과 대조된다. 60세 이상은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재난을 꼽은 비율이 1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고, 역시 식민지배와 군국주의(28.3%) 같은 과거사와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렸다.

[표 1] 연령대별 일본 이미지⁴ (단위: %)

	원전사태, 지진 등 재난	식민지배, 군국주의	아베 총리 등 정치인	경제대국	세계적 기업	스포츠, 대중문화
전체	31.3	24.1	22.6	6.6	4.2	2.2
20대	44.9	19.7	10.5	4.8	7.8	4.7
30대	43.5	15.8	21.2	4.8	5.3	3.0
40대	30.4	27.3	26.2	8.6	2.5	0.9
50대	24.6	27.7	28.3	8.1	3.3	0.4
60세 이상	17.2	28.3	25.1	6.3	2.8	2.1

(2) 일본인과 일본 문화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0= 매우 멀게 느낀다~10점= 매우 가깝게 느낀다)은 지난해 3.01점, 올해 3.74점으로 나타났다. 비호감 수준인 5점 이하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친밀감이 4~5점 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일본인 친밀감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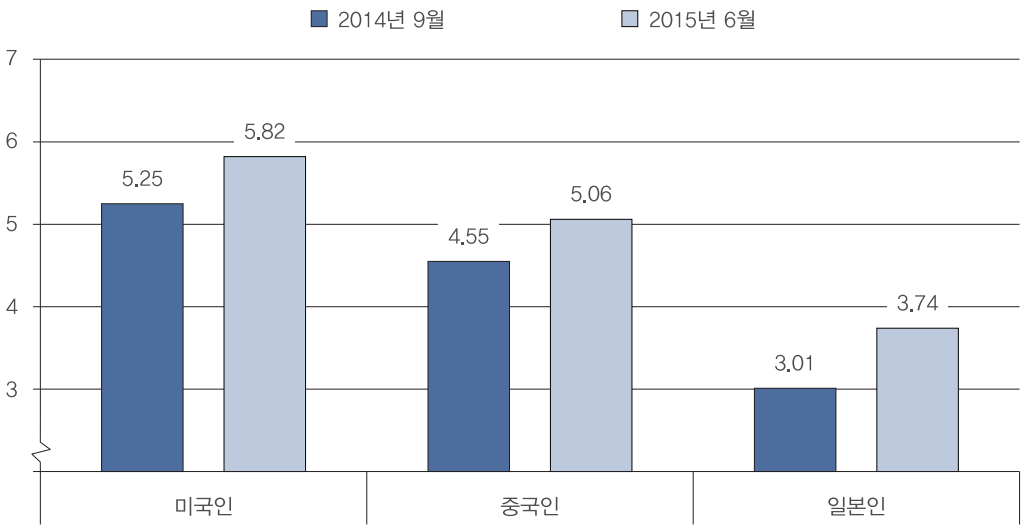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이 지난해 보다 0.73점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같은

3.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4. 일본 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로 ‘기타’, ‘모름/무응답’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기간 미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친밀감이 각각 0.57점, 0.51점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컸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음에도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은 오히려 더 많이 상승했다. 이는 한국인이 한일관계와 일본인을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⁵

[그림 2] 일본인 친밀감⁶ (단위: 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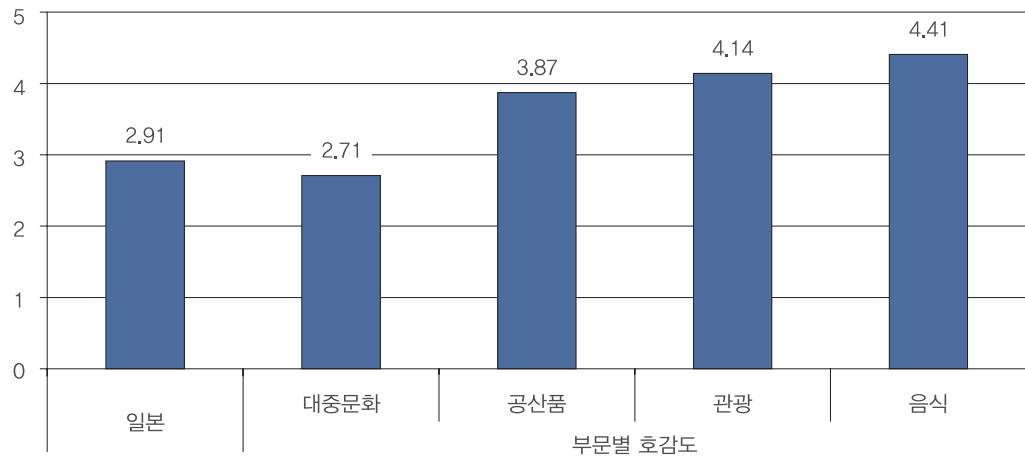


이어 일본 호감도를 대중문화, 공산품, 관광, 음식으로 나눠 물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음식으로 이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4.41점이었다. 이 외에 관광 4.14점, 공산품 3.87점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국가 호감도) 보다 약 1점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일본 가요,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2.71점으로 일본 호감도(2.91점) 보다 더 낮았다.

흥미롭게도 한국인의 주변국민 친밀감 역시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다.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일본에 대한 부문별(음식, 관광, 공산품, 대중문화) 호감도는 젊은층에서

5. 한국인의 일본, 한일관계 인식이 주로 아베 총리 등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의 언행과 연관되었기 때문이다.
6.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9월 7~10일, 2015년 6월 9~10일).

[그림 3] 일본 호감도⁷ (단위: 0~10점)



높았다. 20대의 일본인 친밀감은 5.10점으로 중간치인 5점(‘중립’을 의미)을 넘었고, 중국인 친밀감(4.78점) 보다 더 높았다. 일본인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60세 이상(2.30점)으로 이는 중국인 친밀감(5.25점)에 비해서도 3점 가까이 낮았다.

[표 2] 연령대별 주변국민 친밀감 (단위: 0~10점)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전체	3.74	5.82	5.06
20대	5.10	5.73	4.78
30대	4.77	5.30	4.91
40대	3.76	5.53	4.86
50대	3.12	5.96	5.47
60세 이상	2.30	6.51	5.25

7.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1~2일, 5~6일). 일본 호감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호감도(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조사결과다.

뿐만 아니라, 젊은층은 일본 음식과 관광, 공산품 등에 대해서도 눈에 띄게 높은 호감을 보였다. 모든 면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일본에 높은 호감을 갖고 있었다. 음식(5.55점), 관광(4.68점), 공산품(4.75점), 대중문화(4.02점)로 나눠 측정한 일본의 부문별 호감도 역시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각 부문별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았다.

일본에 대한 연령대별 호감도 차이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20대가 일본에 가장 호의적이었고, 60세 이상이 가장 적대적이었다. 이 연령대별 차이는 각 세대가 경험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일본 인식이다. 20대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희미했고, 과거 ‘경제대국’ 일본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인지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이 적었다.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교육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대체로 좋지 않았으나, 역사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젊은층의 역사 인식이 약화됐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들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3] 연령대별 일본 호감도: 부문별 호감도 (단위: 0~10점)

	음식	관광	공산품	대중문화
전체	4.41	4.14	3.87	2.71
20대	5.55	4.68	4.75	4.02
30대	4.81	4.53	4.26	3.07
40대	4.27	4.17	3.84	2.29
50대	4.11	4.15	3.57	2.18
60세 이상	3.35	3.27	3.11	2.11

(3) 일본과 아베 총리 호감도

악화된 한일관계는 일본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음~10점= 매우 호감이 있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주변국들에 대한 호감도 보다 낮았다. 올해 6월 조사에 따르면 일본 호감도는 2.91점으로 북한(2.34점)과 최하위를 다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⁸

아베 총리 호감도가 일본 호감도보다 낮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⁹ 동일한 시기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음~10점= 매우 호감이 있음)를 비교한 결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호감도보다 더 낮았다. 일본 호감도가 최저 2.27점(2014년 3월)에서 최고 3.25점(2015년 1월)이었던 반면, 아베 총리 호감도는 최저 0.99점(2014년 1월)에서 최고 1.65점(2013년 7월)으로 차이를 보였다.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에서 온도차가 발견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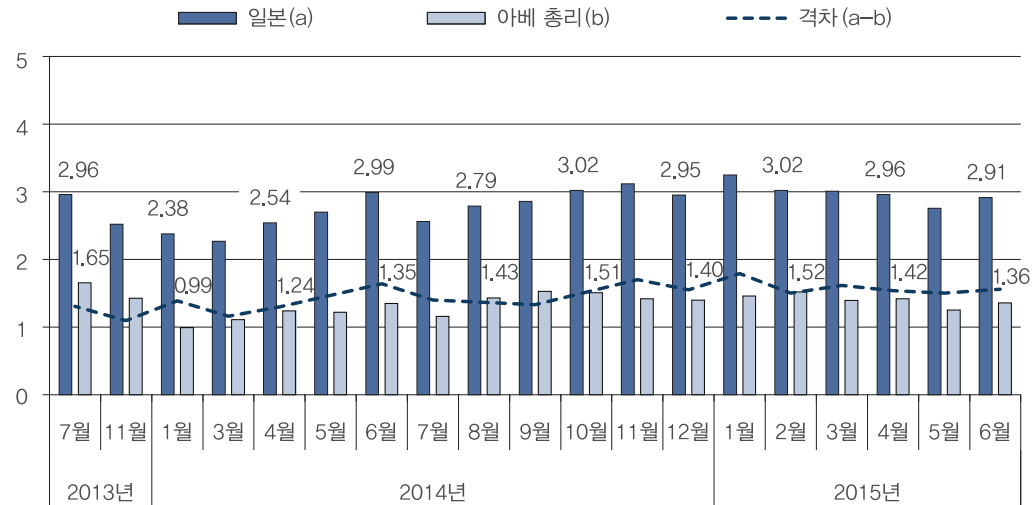
아베 총리에 대한 강한 비호감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직후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 호감도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직후(2014년 1월) 0.99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하락폭도 0.43점으로 3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 호감도의 하락폭은 0.14점에 그쳤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일본이란 국가 자체보다 아베 총리의 행보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던 것과 대조된다.¹⁰

[그림 4]에서 보듯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격차는 2015년 1월 1.79점(값= (a)-(b))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양국 정상간 긴장이 지속된다면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8.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5.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 최근 일본 호감도는 한일관계 악화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6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5.94점), 중국(5.04점), 러시아(4.05점), 일본(2.91점), 북한(2.34점)의 순이었다.

9. 올해 6월 국가수장 호감도는 오바마 대통령(6.00점), 시진핑 주석(5.05점), 푸틴 대통령(3.54점), 아베 총리(1.36점), 김정은 위원장(1.0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5.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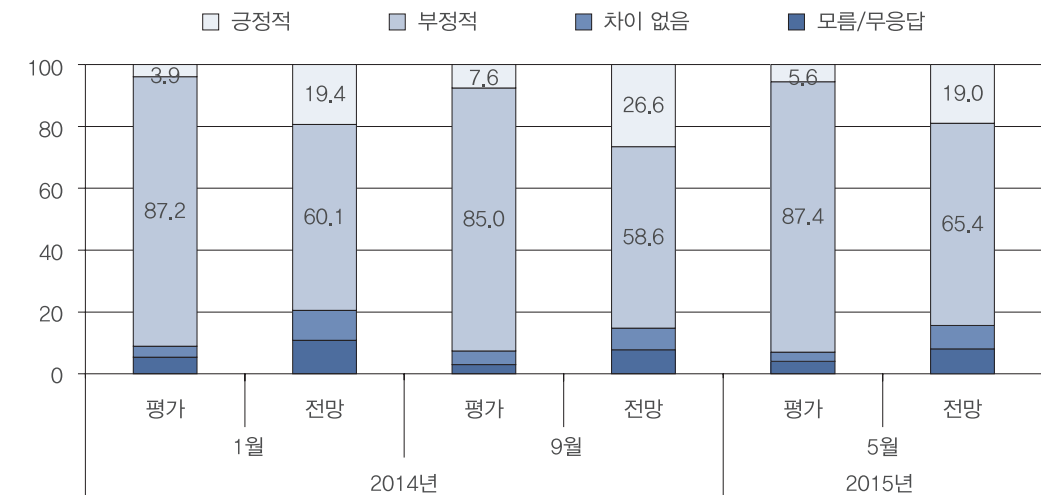
[그림 4] 호감도 격차: 일본 대(對) 아베 총리¹¹ (단위: 0~10점)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반일(反日) 감정은 일본, 일본인 보다 아베 총리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민족주의적 언행이 한국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가 집권 전부터 역사 문제에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냈고, 집권 후에는 ‘다케시마의 날’ 정부주관 행사로 격상, 야스쿠니신사 참배, 위안부 강제성 부인 발언 등으로 한국인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4) 한일관계 인식

한국인은 한일관계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차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일관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80%대 후반을 유지했다. 2014년 1월과 9월 각각 87.2%, 85%였던 부정적 인식은 올해 5월에도 87.4%를 기록하며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로 양국 간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한 비율은 2014년 1월 3.9%에서 2015년 5월 5.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한국인이 다수였다. 2014년 1월 60.1%였던 부정적 전망은 올해 5월 65.4%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차이 없을 것’)까지 고려하면 약 70%이상이 한일관계를 비관적으로 봤다. 반대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한국인은 2014년 1월 19.4%에서 9월 26.6%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5월 다시 19%로 감소했다.

[그림 5] 한일관계 평가 및 전망¹²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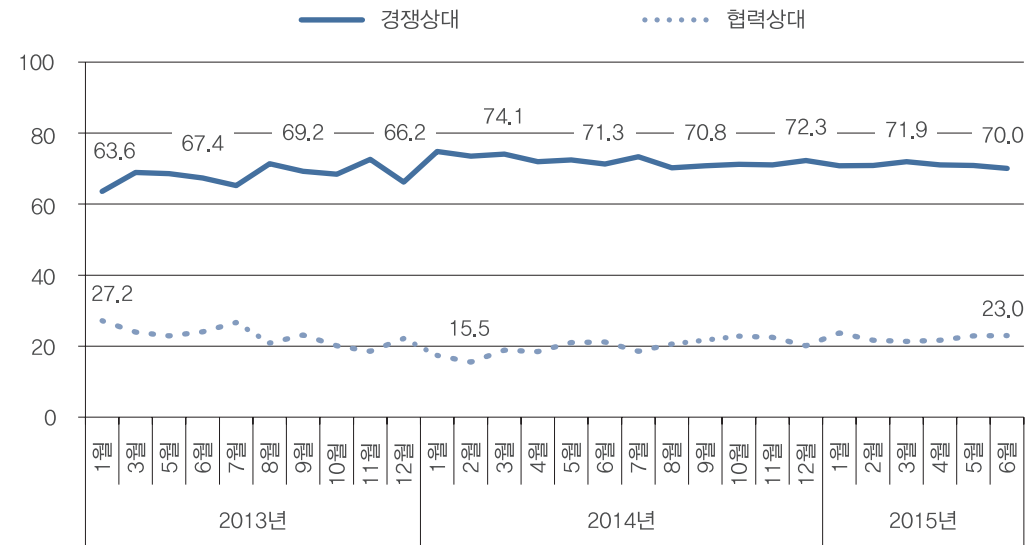
이처럼 한일 갈등이 부각되면서 양국관계를 경쟁(競爭)으로 보는 시각도 늘었다. 한일관계를 경쟁으로 본 한국인은 2013년 1월 63.6%였지만 점차 증가해 2014년부터는 줄곧 70%대를 기록해 왔다. 올해 6월에는 70%가 경쟁관계라고 답했다. 협력으로 본 비율은 최저 15.5%(2014년 2월)에서 최고 27.2%(2013년 1월)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교 50주년이 되는 올해는 20%대를 유지했지만, 6월에도 23.0%에 그쳤다. 이

11.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7월~2015년 6월).

12. 아산 폴(조사기간: 2014년 1월 4~6일, 9월 28~30일, 2015년 5월 18~20일).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차이 없다’와 전망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차이 없을 것이다’를 각각 ‘긍정적’, ‘부정적’, ‘차이 없음’으로 코딩했다.

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사이를 협력관계로 본 한국인이 50~60%(최소 47.5%, 최고 65.1%)대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¹³

[그림 6] 한일관계 인식: 경쟁 대(對) 협력¹⁴ (단위: %)



2.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

(1)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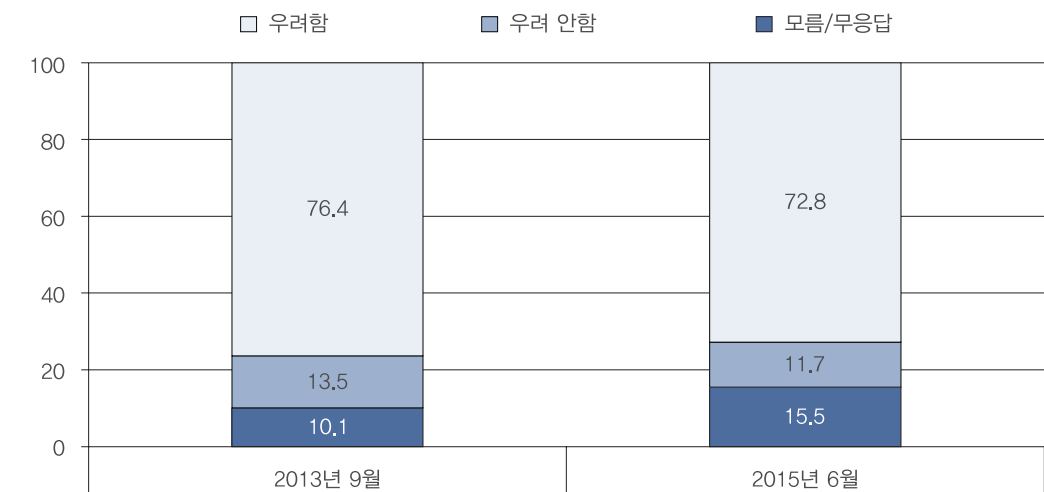
한일관계의 교착 및 갈등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빚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우경화는 보수 정당과 아베 총리의 존재로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전반에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유권자층이 보수화되

13. 김지윤·강충구·이지형. 2015.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 인식”, 아산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14. 아산 풀(조사기간: 2013년 1월~2015년 6월).

고, 전후(戰後)세대의 등장으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2013년 9월 76.4%가 걱정된다고 했고, 올해 6월에도 72.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림 7]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인식¹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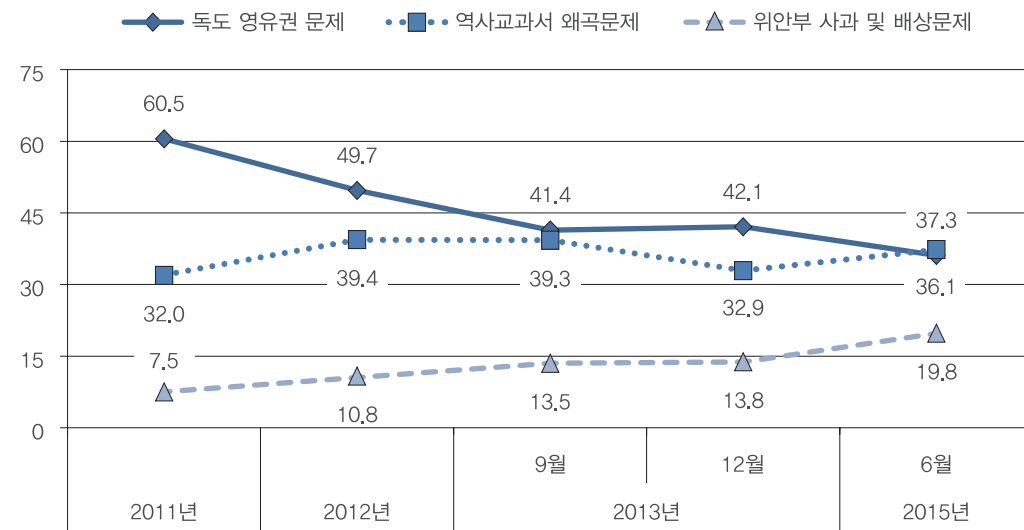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현안은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였다. 한일관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주로 꼽혀왔다. 올해에도 ‘역사교과서 문제’(37.3%)와 ‘독도 영유권 문제’(36.1%)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2011년 60.5%의 한국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던 것에 비해 최근 그 중요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35% 내외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더불어 종군 위안부 사과 및 배상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011년 위안부 문제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꼽은 비율은 7.5%였지만, 올해는 19.8%

15. 아산 풀(조사기간: 2013년 8월 30일~9월 1일, 2015년 6월 5~6일).

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사과 및 배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안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젊은층인 20대가 위안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일본에 호의적이었지만 위안부 문제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향후 위안부 사과 및 배상 문제가 한일관계에 있어 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8] 한일관계 발전 장애물¹⁶ (단위: %)



표면적으로 한일관계는 '65년 체제'에 의해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냉전 이후 미국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의 동맹에 신경 썼고, 최근에는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며 한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목적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시각 차이를 외면했고, 한일 양국도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은 채 교류를 늘려왔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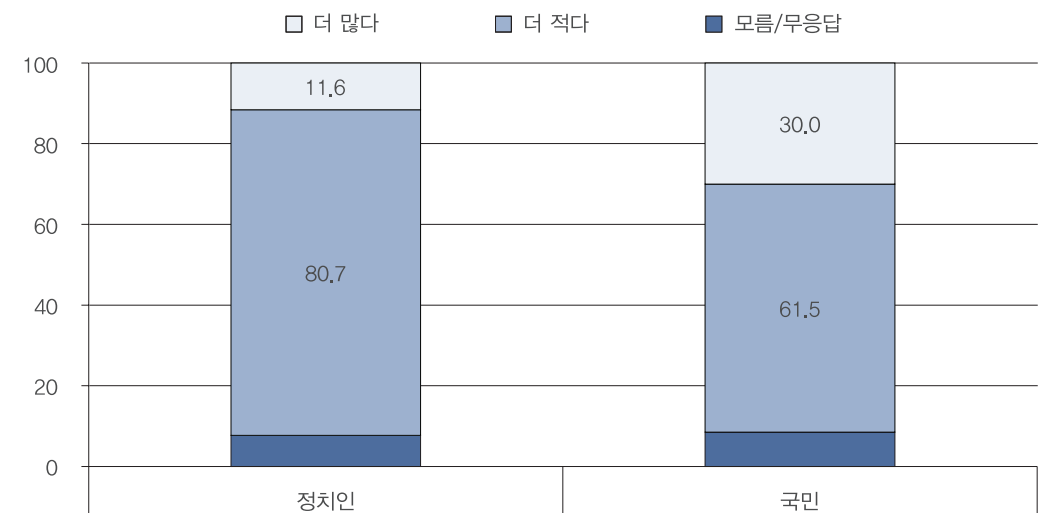
16. 아산 폴(조사기간: 2013년 8월 30일~9월 1일, 12월 29~31일, 2015년 6월 9~10일). 여기에 제시된 2011~2012년 수치는 아산연례조사의 결과다. 해당 조사개요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역사 문제 인식 차이

더 큰 문제는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주변국들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인 10명 중 8명(81%)은 일본 역대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충분하다고 봤다(충분하지 않다 15%).¹⁷ 그러나 한국인은 일본의 반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본 국민 중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30%였고, 정치인 중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 한국인은 11.6%였다. 즉 70%가 넘는 한국인이 일본 국민과 정치인이 과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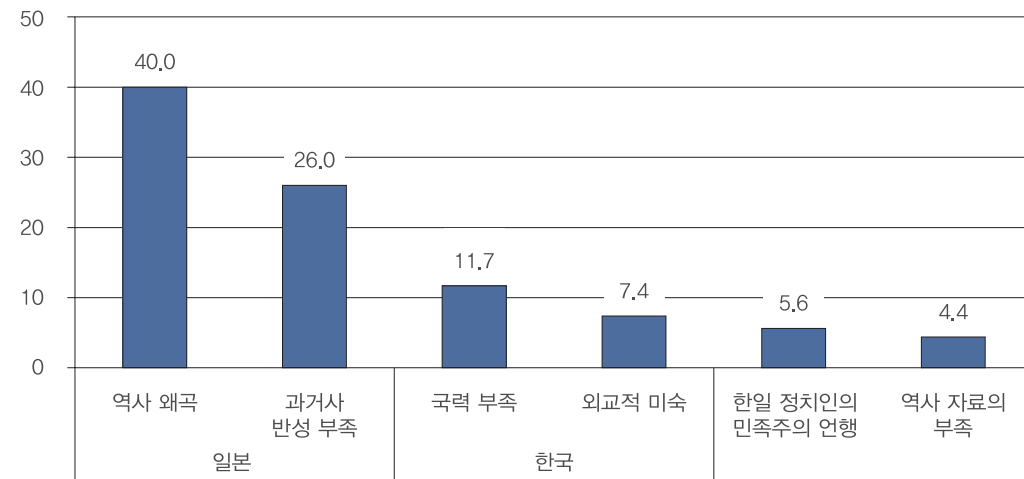
여기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람이 국민(30%)보다 정치인(11.6%) 중에 더 적다고 본 점은 흥미로운 결과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 정부 각료 등의 망언이나 민족주의 언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 나아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베 총리와 같은 일본 정치인의 태도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림 9] 일본의 과거사 반성: 정치인 대(對) 국민¹⁸ (단위: %)



그럼 한일 역사갈등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봤을까? 많은 한국인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봤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과거사 반성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 비율이 각각 40%, 26%로 나타났다. 한국에 원인이 있다고 본 한국인은 그 이유로 11.7%가 ‘국력 부족’, 7.4%는 ‘외교적 미숙’을 꼽았다. 다음으로 ‘한일 정치인의 민족주의 언행’과 ‘역사 자료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각각 5.6%, 4.4%로 소수였다. 결국 다수인 66%의 한국인은 한일 역사갈등이 일본(역사 왜곡+과거사 반성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림 10] 한일 역사갈등의 원인¹⁹ (단위: %)



17. 김경필. 2015. “일본인 81% ‘역대 총리 한·중에 충분히 사과했다’”, 조선일보, 2015년 2월 2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5/2015022502091.html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18. 아산 풀(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19. 아산 풀(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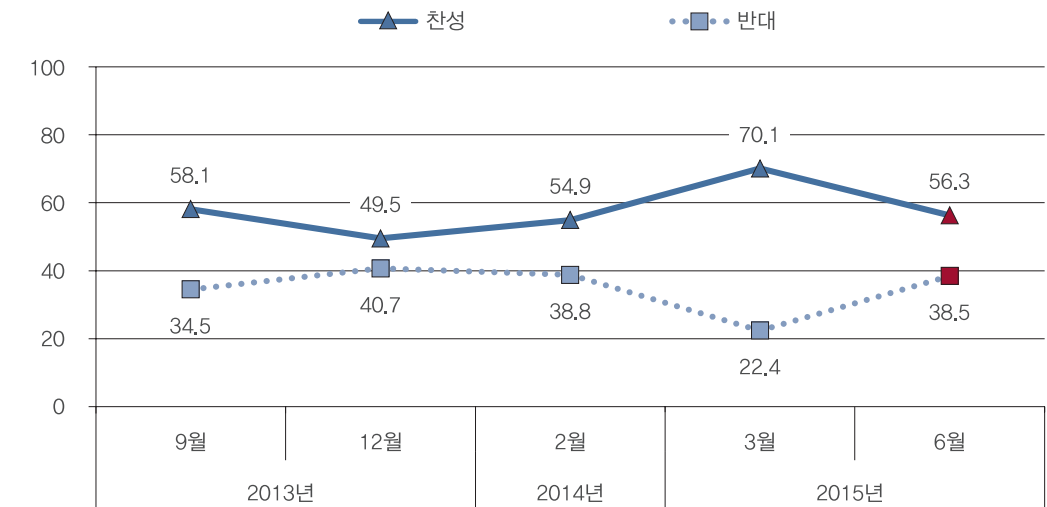
3. 한일 역사갈등을 넘어

(1) 한일관계 정상화와 역사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지난 6월 말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상대국 주최 행사에 참가해 미래지향적 축사를 건네면서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 사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일본과 역사 문제로 부딪히고 있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림 11]에 제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그림 11]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의견²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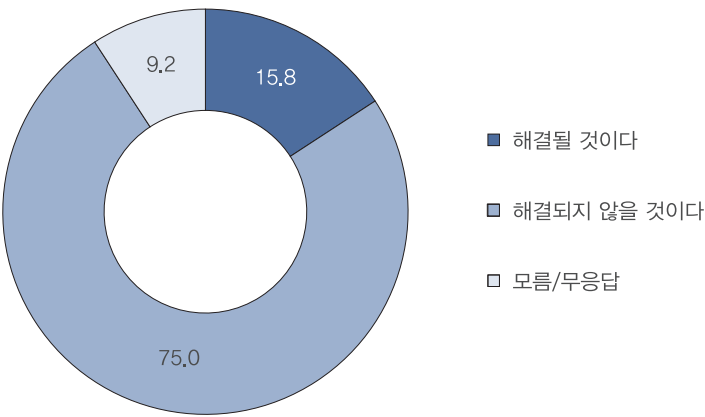
20. 아산 풀(조사기간: 2013년 8월 30일~9월 1일, 12월 29~31일, 2014년 2월 23~25일, 2015년 3월 18~20일, 6월 9~10일). 2015년 3월 조사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물었다. 다른 시기의 조사는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물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며 논란이 됐을 때(49.5%)를 제외하면 대략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했다. 올해 6월 조사에서는 ‘8월 아베 담화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더라도’라는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56.3%)을 넘었다. 반대는 38.5%였다. 한국인의 정상회담 지지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과 역사인식의 간극이 매우 크고, 한국인 중 다수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며, 일본 국민과 정치인의 대부분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많은 한국인은 왜 정상회담을 지지했을까?

정상회담이 위와 같은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한일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50.9%)’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²¹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봤을 때, 한국인의 인식에는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었지만 한일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75%)이라고 봤다. 한일관계가 좋아지면 역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 한국인은 15.8%에 불과했다.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역사 문제를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2]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의 관계²² (단위: %)



한국인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한 한국인이 88%나 되었지만, 실제로 일본이 향후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이라고 본 비율은 12.2%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82.6%나 되는 한국인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바라지만,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인의 비관적 전망이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젊은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앞으로 한일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젊은 세대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신이 짙었다는 것은 눈 여겨 볼 점이다.

[표 4]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²³ (단위: %)

	의견	비율
아베 담화	반성·사죄 담아야	88.0
	반성·사죄 담지 말아야	5.0
	모름/무응답	7.0
일본의 과거사 사과	할 것이다	12.2
	하지 않을 것이다	82.6
	모름/무응답	5.2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여전히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향후 일본이 태도를 바꿔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를 비관적으로 봤는데, 이는 일견 일본의

21. 아산 풀(조사기간: 2014년 2월 23~25일). 다음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19.5%),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10%),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6%),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4.7%)의 순이었다.

22. 아산 풀(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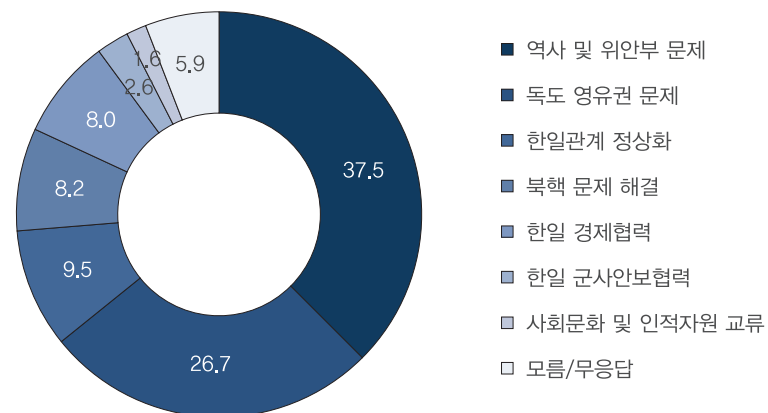
23. 아산 풀(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6월 9~10일).

반성과 사과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이 뿌리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후 정상회담과 관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2) 한일관계 과제

앞서 한국인 중 다수가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만큼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다. 만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양국 정상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역시 역사 문제가 1순위로 지목됐다. ‘역사 및 위안부 문제’가 37.5%, ‘독도 영유권 문제’가 26.7%로 나타났다. 독도 문제를 역사 왜곡에 의한 영토 문제로 보면 역사 문제를 우선적 논의 사항으로 꼽은 한국인이 64.2%로 다수를 차지했다. 역사 문제를 한일갈등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그림 13] 한일정상회담 의제²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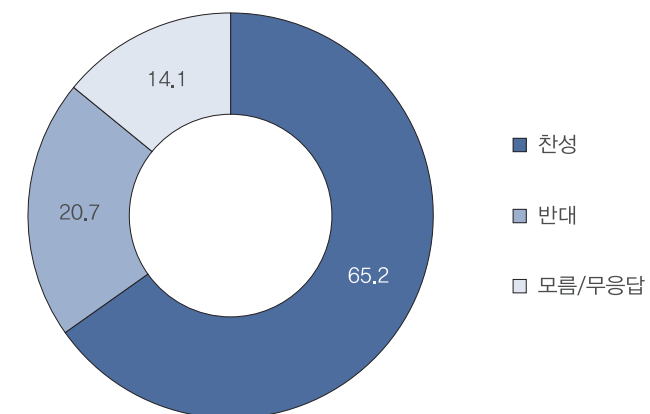
24.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9~10일).

다음으로는 ‘한일관계 정상화’(9.5%), ‘북핵 문제 해결’(8.2%), ‘한일 경제협력’(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일 군사안보협력’과 ‘사회문화 및 인적자원 교류’를 꼽은 비율은 각각 2.6%, 1.6%로 소수였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역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한일 갈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나타난 결과다. 일본의 적극적인 사과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3) 제한적 한일협력

역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역사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해야 한다는 태도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이 바라는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최근 역사 문제와 한일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14] ‘투 트랙’ 대일 외교: 과거사와 한일협력 분리²⁵ (단위: %)



25.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한국인의 65.2%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역사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대한 한국인은 20.7%에 불과했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일본과 역사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한국인은 경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협력(8%)은 역사 문제를 제외하면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현안 중 하나였다. 일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37.7%로 다수를 차지했다. ‘별 영향이 없다’는 27.7%,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26.2%였다.

그러나 한일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인은 한일협력 전반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만, 안보협력에는 예민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은 52.4%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별 영향이 없다’는 25.9%,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13.8%에 불과했다.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물었을 때에도 한국인의 의견은 ‘필요하다’ 40.6%, ‘필요하지 않다’ 40.1%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일협력 전반을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안보협력에는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한 셈이다.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22.9%),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17.7%)를 그 이유로 들었다. 반대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은 ‘일본의 군국화 우려가 여전’(28.9%)하고, ‘일본이 우리의 안보와 무관해서’(11.2%)를 그 이유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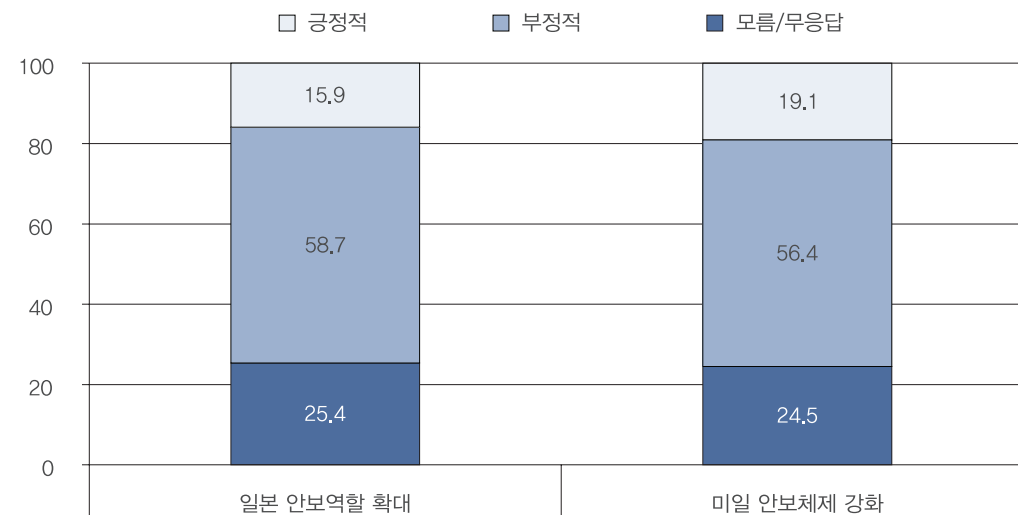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는 지지후보 변경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옹호한다면 지지를 변경하거나 지지변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각각 27.4%, 28.6%로 나타났다. 그대로 지지할 것이라는 답은 20.8%였다. 이는 지지후보의 한일 ‘경제’ 협력 옹호를 가정한 상황과 차이가 컸다. 한일 경제협력을 옹호하는 후보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대로 지지할 것’이 35.2%로 다수였다. ‘지지후보 변경 고려’가 25.6%로, 앞서 안보협력 옹호를 가정한 때와 비슷했지만, ‘지지후보를 변경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는 18.1%로 안보협력 때보다 낮았다. 한국인에게 한일 간 경제협력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안보협력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그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한국인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도 부정적이었다. ‘동북아 내 일본의 안보역할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8.7%로 다수였고,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9%였다.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가 군사대국화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체제 강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56.4%로 절반을 넘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19.1%였다. 절반이 넘는 한국인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밀월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봤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체제를 중요하게 보더라도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 확대에는 부정적이었다.

[표 5]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견²⁶ (단위: %)

		비율	누적 비율
필요	북한의 위협에 대처	22.9	40.6
	중국의 부상을 견제	17.7	
불필요	일본의 군국화 우려가 여전	28.9	40.1
	우리의 안보와 무관	11.2	
모름/무응답		19.3	

26.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9~10일).

[그림 15] 일본의 안보역할에 대한 인식²⁷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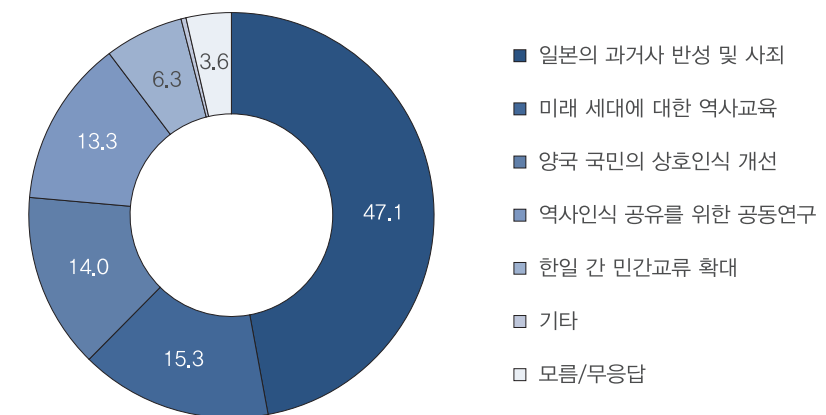
요약하면 한국인은 일본을 경제협력 대상 또는 지역 내 이웃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역사 문제를 접어두고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는 회의적이었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나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실질적 위협이 되는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본과의 안보협력,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보인다.

(4) 한일관계 발전 방안

앞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인이 요구하는 바는 단순했다. 앞선 결과에서 역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밝혀졌듯이 많은 한국인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사죄’(47.1%)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절반에 가까운 한국인이 진정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7.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5~6일, 9~10일). 이는 일본에 호의적이었던 젊은층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15.3%),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개선’(14%),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공동연구’(13.3%)로 나타났다. ‘한일 간 민간교류 확대’라고 한 응답은 6.3%였다. 전반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일본은 한국의 반복된 과거사 사과와 배상 요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인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림 16] 한일관계 발전 방안²⁸ (단위: %)

한일정상회담이나 ‘투 트랙’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는 분명히 높았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과 시급한 부분에서의 선택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신뢰하는 진정한 우방이 되길 원한다면 역사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나가며

한국인은 ‘일본’에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산적한 현안에는 한일 양국이 협력을

28. 아산 폴(조사기간: 2015년 6월 9~10일).

강화해야 한다고 봤지만,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둘 생각은 없었다. 과거 ‘피해자’-‘가해자’의 역사는 한국인이 일본과 일본인에 친밀감을 갖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다만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고, ‘경제대국’ 일본의 모습이 친숙하지 않은 젊은층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덜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일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이면에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어차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역사 문제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느니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의 협력이나 표면적 화해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역사 문제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한 답답함도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외교에서 한일협력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이 뚜렷해지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해진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인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듯 하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양국 정상에 상대국 대사관 주최 기념행사에 참석해 화해의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한일관계에 순풍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서 한일 간 인식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듯이 진정한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역사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경제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마다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일 양국 모두 역사 문제가 노력한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오해’를 풀고, 굳이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판단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세련된 대일(對日) 외교가 필요한 때다.

부록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 폴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SAN REPORT

한일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발행일 2015년 8월

지은이 김지윤·강충구·이지형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13-3 93300 비매품



9 791155 701133 비매물
ISBN 979-11-5570-113-3